

전북도 1조원 벤처펀드 규약 위반·이해충돌 의혹

전북지역 AC 세컨더리펀드 조성 지원 10억5000만원 출자하고도 현재까지 조성된 75억 중 도내 투자 '전무' 이차전지 분야 투자하기 위해 조성, 펀드 출자자와 이해관계에 이는 제빵기업에 투자... "전수조사 필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조성한 벤처펀드 일부가 당초 조성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운용되고 있음에도 전북자치도가 이를 통해·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벤처펀드 운용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벤처펀드는 도내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약 1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했다고 홍보해 왔으며, 김관영 지사도 지난 1월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를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 그러나 실제 펀드 운용 실태를 보면 조성 규모에 걸맞은 관리·통제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문제가 제기된 전북 지역 AC세컨더리펀드(1호)는 총 150억원 규모를 목표로 조성 중인 펀드로, 전북자치도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150억원을 출연해 도내 이차전지 관련 창업기업에 30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 출연금은 10억5,000만 원에 달하지만, 도내 기업 투자 실적은 전무하며, 조성된 약 75억원 중 66억원 이상이 타 지역 기업에 투자됐다.

김 의원은 "펀드 규약에는 이차전지 분야 터프테크 보유 기업이라는 업력 3년 이내 또는 연 매출 20억원 이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 투자 기업 중 일부는

이 기준을 벗어난 사례가 확인됐다"며 "전북자치도가 규약에 따른 투자 통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투자 대상 기업 중에는 펀드 조성을 위한 개인 출자자와 투자 기업 주주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규약과 다른 집행이 사실이라면 배임 여부까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관련 규약과 투자 심사 자료 제출을 전북자치도에 요청했으나, 도가 "공개할 수 없는 자료"라며 제공을 지연한 점을 문제 삼으며 "도민의 세금이 투입된 펀드임에도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을 지연하고 있는 것은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1조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했다고 자랑하기 전에, 그 펀드들이 과연 규약과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부터 도민 앞에 검증받아야 한다"며, "개별 펀드에 대한 해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북자치도가 출연한 전체 벤처펀드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통해 운용 실태와 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만호 기자

반려동물도·군립공원 동반 출입 제한적 허용

'도시사 출마' 민주 안호영 의원, 두번째 공약 발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은 '자치만 중요한 공약 시리즈' 두 번째로 전라북도 도립·군립공원 일부 구간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이번 공약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키우는 도민들의 여가권을 보장하면서도 환경 보호와 공원 이용 질서를 함께 고려한 균형형 공원 이용 정책으로 평가된다.

현재 국내 반려동물 인구는 약 1,5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0%에 이른다. 반려문화가 일상으로 자리 잡았지만 반려가족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어려움은 '반려견과 함께 갈 수 있는 공공 여가 공간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도시공원과 자연공원에서 반려동물 출입을 둘러싼 민원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는 전면 금지 중심의 관리 방식이 유지돼 왔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이제는 막는 방식이 아니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립공원 공단이 북한산, 계룡산, 가야산 등 일부 국립공원에서 반려견 동반 탐방을 시범 허용한 것도 정책 변화의 중요한 신호로 평가된다.

안호영 의원이 밝힌 공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라북도 도립공원 중 생태 훼손 우려가 낮고 관리가 가능한 기존 탐방로·둘레길을 중심으로 시범 구간을 지정하고, 군립공원은 시·군과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해당 구간에서는 목줄 착용(2m 이내), 인식표 부착, 배변 관리 의무화 등 엄격한 이용 기준을 적용하며, 맹견은 출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반 시에는 과태

료 등 행정 조치가 병행된다.

또한 예방접종 여부 확인 필요 시 예약제나 인원 제한을 도입해 안전과 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민원 발생 여부, 이용자 만족도, 생태 영향 등을 종합 평가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팻 티켓 교육과 지역 동물보호단체·수의사와의 협력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안 의원은 "이 정책은 반려인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무분별한 출입을 줄이고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해법"이라며, "공공공간은 배제의 공간이 아니라 조율과 공존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약을 통해 반려가족의 여가 접근성이 개선되고, 도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반려동물 동반 관광 수요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나아가 전북이 반려문화와 환경 보호가 조화되는 선도적 공원 관리 모델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1만호기자 · 진안=우태만기자

진보당 도당 "호남대통합 공론화하자"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이대로라면 전북은 '특별고립도' 될 것"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사실상 확정 단계에 접어들 가운데, 진보당 전북도당이 전북의 고립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하며 전북 대책 마련과 '호남대통합' 공론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진희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과 강성희 전 국회의원, 오은미 전북의회 의원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추진 과정에서 전북은 논의의 중심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전북은 '내륙의 섬'이자 '특별고립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공개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대통령의 광주·전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 발언을 언급하며, 통합 광주·전남에 대규모 재정 특례와 자치권 확대, 공공기관 이전, AI·에너지·첨단산업 확대 등 조성 등 파격적인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북은 특별자치도라는 명칭과 달리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나 전략 산업 유치에서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진보당은 전북이 단독 생존 전략이나 충청권 편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대안으로 '호남대통합'을 제시했다. 역사·지리·문화적 공동체인 호남이 하나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결집해야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전북자치도지사와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에게 긴급 공개토론을 요청하며 "전북 출대를 끝낼 골든 타임이 놓칠 수 없다"고 밝혔다.

/1만호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혁신당 도당 "민주, 전북 재보궐선거 무공천 선언을"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15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전북 지역 재보궐선거 전략공천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무공천' 선언을 촉구했다.

전북도당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재보궐선거에서 전략공천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문재인·이재명 대표 시절 약속했던 정당 혁신과 귀책 사유 시 무공천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영대 전 국회의원 측의 여론조사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 사태는 민주당의 일당 독점 구조와 오만이 낳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전북도당은 "도민의 주권을 훼손한 책임을 지기보다 전략공천을 통해 득표권을 유지하려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민주당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무공천을 통해 정치적 책임을 다하고 공천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1만호기자

6월 7지방선거, 저도 출마합니다

"기득권 깨뜨리는 첫 여성시장 될 것" | 국주영은 도의원, 전주시장 도전

전주시 사상 첫 여성시장으로 국주영은 전 전북특별자치도의원(61)이 전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특히 국주 전 의장은 전주시에 탁진구 송천동에서 전주시의원으로 출발해 전북도의회 의장까지 지난 3선도의원 출신으로 관공을 지낸 여성전주시장 후보로도 정평이 나있다.

국주 전 의장은 15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득권을 깨뜨리는 첫 번째 여성시장이 되겠다"며 "문화와 역사의 도시인 전주에서 담대한 변화의 시작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지방선거는 기득권의 무능과 독선, 빚 폭탄으로 퇴행해 버린 전주시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선거"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전주시는 6,000여원이라는 빛에 허덕이고 있으며 이에 빛간



치 공약이 아니라 빚부터 갚는 정직한 시장이 되겠다"며 "재정 사업을 전수조사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고 신규 대형 투자 사업은 채무 비율이 정상 회복될 때까지 과감히 유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주 전 의장은 △지방채 재로 건

전 재정 도시 △38개 시민 공문장 미런 △피자집 AI의 거점 도시 △K-컬처 플랫폼 문화 산업 도시 △제3금융 중심지 글로벌 자선운용 도시 △365일 안전, 돌봄 건강 도시 △15분 생활권, 교통편의 도시 등 7대 최우선 공약을 제시했다.

국주 전 의장은 "불통의 장막 뒤에서 시민들을 뺏아내려 내모는 시정은 종식돼야 한다"며 "정책결정권을 주권자인 시민의 손에 돌려드리는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국주 전 의장은 전북 입실 출생으로, 전북여고와 전북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전주YMCA 이사과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활동을 하다가 지난 2008년 전주시의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했으며 제12대 전북도의회에서는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권희성기자

"익산 중심 100만 메가시티" | 심보균 전 차관, 익산시장 출사표

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다가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익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익산을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 서부권 핵심 도시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심 전 차관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익산의 멈춘 성장 엔진을 다시 돌려 과거 4대 도시의 위상을 회복하겠다"며 "낡은 행정 방식이 아닌 새로운 전략과 실행력으로 익산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익산 발전의 핵심 비전으로 '익산 중심 100만 메가시티' 구상을 제시했다. 익산·군산·김제 등 인근 도시와의 연대를 통해 광역 경제권을 구축하고, 인구 100만명 규모의 전북 메가시티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심 전 차관은 ABC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A(AI 기반 스마트도시)는 스마트 농업 인공지능센터를 거점으로 농업·행정·의료 전반에 AI 기술을 도입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이 정착하는 혁신 도시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B(Bio·식품산업 고도화)는 국가식물원클러스터에 첨단 바이오 기술을 결합해 익산을 글로벌 바이오·식품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방안이다.

C(Culture·문화관광)는 백제 역사와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역사문화 경제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교통·물류 분야에서는 새만금 신항과 새만금 신공항, 익산역을 하나



로 잇는 '트라이포트(Tri-Port)' 체계 구축을 공약했다.

익산역을 호남권 철도 허브이자 복합환승센터·컨벤션센터로 조성해 물류·관광·비즈니스의 중심축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기업이 몰리는 물류 도시, 관광객이 체류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생활 밀착형 행정 개혁도 강조했다. 심 전 차관은 시민의 일상 현장에서 해법을 찾는 생활민원 기동순찰대를 운영해, 형식적인 민원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행정 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청년 정책 분야에서는 청년시장을 시장 직속 체계로 전면 확대 개편하고, '청년특보'와 '청년대변인'을 신설해 청년에게 실질적인 예산권과 정책 결정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심 전 차관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현장에서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익산의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며 "익산을 호남 최고의 도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명품 도시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늘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과 함께 익산의 위대한 대도약을 시작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심보균 전 차관은 1961년 출생으로 부모님이 사는 익산에 자리를 잡아 이리초등학교와 이리중학교, 전주고를 거쳐 서울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일본 시바타대학교 정책학과 석사,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박사학위를 수료했다.

1987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행정자치부 인사과 서기관과 민방위 기획과장, 대통령비서실 인사제도 비서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실장,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지방시대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 행정자치부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차관을 역임했다.

또한 유엔 사무국 직속 산하기구 유엔 거버넌스센터 위원장, K-ESG 평가위원, 민간합동 ESG 정책협의회 민간위원을 거쳐 현재 전북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만호기자 · 익산=이재춘기자

전북 송전탑 대책위, "용인 반도체 산단 공식 입장 밝혀라"

전북 정치권에 표명 촉구

전북지역 시민·환경단체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단지 조성 계획과 이에 따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문제를 둘러싸고 전북 정치권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도백·조경희)는 전북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이원택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북 정치권에 대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면 재검토와 지역 재배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도민 앞에 밝히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북 각 시·군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등 11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50여 명이 참석했다.

대책위는 "수도권 반도체 산업을 위해 전북 농산촌에 345kV 초고압 송전탑이 무더기로 건설되는 것은 지역 주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라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문제는 지역 갈등이 아니라 국가 전력 정책과 균형발전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가 15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정치권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 입장을 도민 앞에 밝히 것을 요구 하고 나섰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용인 산단의 막대한 전력 수요와 송전망 건설의 한계를 지적하며, 남부 지역 중심의 산업 재편 필요성을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전북 정치권이 대통령의 지역 균형발전 기조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김관영 지사와 이원택 의원의 명확한 입장 표명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의 도당 차원 특위 즉각 가동 △전북 정치권의 초고압 송전선로 전면 백지화 선언 △수도권

반도체 특점 구조를 깨기 위한 전국적 연대기구 구성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물과 전기가 부족한 수도권에 반도체 산업을 고장하고 그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전북 정치권이 계속해서 애매한 태도를 보일 경우 지방선거를 통해 도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석자들은 박용근 전북도 정책협력관을 만나 기자회견문을 전달했다.

/1만호기자